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 多者間 經濟協力 關聯 —

1994. 12.

金圭倫 (國際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21세기의 한국경제는 무역 및 경제규모면에서 공히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韓半島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중요성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經濟協力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經濟成長 戰略을 채택하여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1세기에도 한국 경제에서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제한적이지만 경제개방을 모색하고 있어 對外經濟協力을 強化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에서는 21세기 한반도경제의 대외경제협력 방향을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분석·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韓半島 統一環境 변화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통일정책 입안에 參考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 12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본 연구는 國際經濟環境의 변화 및 아시아지역의 經濟的力動性和 북한의 제한적 개방 등이 韓半島 統一環境을 改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21세기의 多者間 經濟協力 發展展望 및 統一韓國의 經濟的位相 分析을 통하여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방향을 제시하였다.

1. 多者間 經濟協力 發展展望

한반도와 관련한 다자간 경제협력은 세계적 차원에서 1995년 출범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와 아·태지역의 광역적 차원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동북아시아의 소지역차원에서 동북아경제협력 등으로 구분된다.

세계무역기구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달리 무역정책검토기구 및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는 신속한 의사결정방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국제무역관계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은 상품을 중심으로 한 교역의 자유화뿐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분야까지 포함한 회원국간 무역장벽 완화와 시장개방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60~70년대에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한 자유무역주의 기조에 힘입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한 바 있으며,

21세기의 경제발전을 위하여도 國際貿易의 自由化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무역체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아·태지역의 광역적 차원에서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는 아·태경제협력체는 1994년의 아·태경제지도자 회의를 통하여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완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아·태경제협력체는 대상지역이 광범위하며 회원국간 경제발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開放的 地域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바, 아·태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소지역적 차원의 다자간 경제협력 방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지도자 회의의 2년 연속 개최는 18개 회원국 지도자들이 회동한다는 점에서 아·태경제협력체가 경제적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경제협력은 국제연합개발기구(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의 발전으로 인하여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는 中國의 經濟成長 潛在力과 일본의 경제력 및 한국의 경제적 역동성으로 인하여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각국이 구상차원에서 제시한 환황해권 및 환동해권 등 미래의 역내 협력구도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당분간 양자간 경제관계의 확대 및 이에 따른 相互依存性을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관리하는 차

원으로 발전하면서 점진적으로 다자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2000年代 南北韓의 經濟力

2000년대 남북한의 상대적 경제력을 실질구매력(PPP)에 의한 국내총생산 및 인구나 수출입 전망을 통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인구수 격차는 2000년에 2천2백만명으로 약간 증가하나, 배율로 비교하면 1990년에는 남한이 북한의 2배였으나, 2000년에는 1.9배, 2010년에는 1.8배로 감소한다. 1990년에는 북한이 남한의 약 6.9%에 불과한 국내총생산을 기록하였으며, 21세기 남·북한의 국내총생산 지표 전망을 비교·분석하면, 2000년에는 북한이 남한의 약 6.4%, 2010년에는 북한이 남한의 약 8.8%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제력은 현재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남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대외경제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수출입 전망치를 분석하면 北韓 經濟의 南韓 經濟에 대한 劣勢는 더욱 자명해진다. 즉 북한은 1990년에 남한의 약 2.6%에 불과한 수출액과 4.6%에 불과한 수입액을 기록하였으며, 2000년에는 수출면에서 약 4.1%, 수입면에서 약 4.6%, 2010년에는 약 5.2%, 약 7.6%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남·북한 경제의 상대적 우열관계는 남·북한 경제가

통합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북한 지역경제의 발전 또는 후퇴가 남한 지역경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 지역경제의 대외무역이 남한 지역경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통일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방향은 남한 지역경제의 대외경제관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統一韓國의 經濟的 位相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 경제지표의 절대적 수치보다는 상대적 비교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통일한국의 경제지표를 2000년과 2010년 남·북한의 경제지표를 합산한 것으로 가정하여 인접국가와 비교하였다. 統一韓國의 人口를 인접지역과 비교하면, 통일한국의 인구가 중국 동북3성 인구의 64%(2000년) 및 62%(2010년)가 될 것이며, 일본 인구의 56%(2000년) 및 60%(2010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한국의 國民總生産 예측치를 인접국가들과 비교하면, 1990년의 경우 일본은 남북한의 약 11.2배, 중국은 남북한의 약 1.5배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0년의 경우 일본은 통일한국의 약 9.7배, 중국은 통일한국의 약 2배의 국민총생산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의 경우에는 일본은 통일

한국의 약 8.16배, 중국은 통일한국의 약 2.4배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예측치 분석결과는 통일한국과 일본간 상대적 경제력 격차는 21세기에 들어 점차 줄어들어 가는 반면 중국과의 상대적 경제력 격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2000년대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 지표 예측치를 비교하면, 한국은 2000년에 10위, 2010년에 9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10대 경제강국에는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3개국이 기록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에 속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면 세계 10대 經濟強國 중 5개국가가 아·태지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태지역이 2000년대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4.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21세기의 한반도경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역 및 경제 규모면에서 공히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地理的 重要性에 따라 지경학적으로도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1세기에도 한국 경제에서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은 자립적 주체경제원칙하에 대외무역을 대내경제 활성화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한 결과 대외경제교류에 수반되는 선진국의 기술 및 자본 활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최근 經濟開放의 必要性을 인식하여 해외자본유치를 위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법을 제정·공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한반도경제의 대외경제협력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의 인접국가와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아·태지역의 貿易自由化를 선도하여 미국을 비롯한 북미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고, 동남아국가연합의 경제적 역동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가. 世界貿易의 自由化 先導

한반도가 통일된다 하더라도 북한지역의 천연자원이 통일한국의 천연자원 부존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우므로 통일한국은 자원의 수입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통일한국은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무역이 보호무역주의화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貿易 및 投資의 自由化를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우선 세계무역기구에서 추진할 세계무역의 자

유화가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경제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경제의 관리에 있어 통일한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발언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일한국은 현재의 G-7을 확대한 G-10에의 참여와 OECD, IMF 및 WTO 등 주요 국제경제협력기구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무역, 금융, 투자정책 등에 관한 다자간 국제질서의 정립과 강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나. 開放的 地域主義 維持

통일한국은 아·태지역 차원의 광역적 지역협력과 동북아시아 차원의 소지역적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폐쇄적 형태가 아닌 개방적 지역주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를 모색함에 있어 아·태지역 경제협력은 정부간 협의체를 통하여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모색하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은 국경을 넘어선 경제교류의 활성화라는 자연경제지역(Natural Economic Territory) 개념에 입각한 민간수준의 경제협력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지경학적 중요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북한 지역경제의 개방을 통한 通過貿易과 邊境貿易을 적극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은 북한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남한 지역경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북한 지역경제와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는 경제발전수준이 비슷하므로 이들 지역경제가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경제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先·後進國간 橋梁役割 持續

통일한국 경제는 21세기에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일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남한 지역경제와 북한 지역경제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21세기 통일한국의 경제는 先進國형인 남한 지역경제와 後進國형인 북한 지역경제가 병존하는 상태에서 북한 지역경제를 남한 지역경제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중진국으로서 선·후진국간 교량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후진국에 대하여는 중간수준의 기술을 이전하고 선진국으로부터는 첨단기술을 이전받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은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에서 한국의 무역자유화 시한을 결정하는데 반영되어, 한국의 무역자유화 시한은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간

인 2015년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한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경제관계에서 中國의 立場을 지지할 필요성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남북한 양지역 경제간 격차 조정문제와 아시아지역 개도국과의 원만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국제경제의 관리를 둘러싼 마찰이 노정될 경우 선진국과 후진국 입장을 조정하는 조정자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 多樣한 經濟協力 채널의 開發

통일한국의 인구 예측치를 보면 2000년에 7천1백만명, 2010년에 7천7백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접한 주요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는 한반도에 비하여 국토가 광활하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유럽국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통일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이 될 것이다. 中國의 경우 韓半島와 인접한 東北3省이 통일한국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지역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통일한국이 인접국가와 대외경제협력을 모색함에 있어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함에 있어 민간단체의 역할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할 때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마. 國土均衡發展과의 調和

통일한국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은 한반도의 지경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외지향적 산업입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즉 통일한국의 대외지향적 장기발전전략은 신의주, 평양, 서울, 목포, 광양권을 기본축으로 설정하며 동북으로는 평양지역과 청진·나진을 연결, 동남으로는 대전과 부산간을 연결하는 국토개발 계획모델에 입각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역내 경제관계를 양자관계에서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통일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이 중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대일의존도는 완화될 것인 바, 이는 한국의 대미의존도와 대일의존도로 인하여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던 국토의 불균형 발전 현상을 지양하고 서해안지역 발전을 통하여 2000년대의 대외경제협력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 제시되고 있는 경제협력 구상과 관련, 한반도의 서해를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과 한반도의 동해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

근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의 활성화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統一韓國의 經濟協力은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발전을 均衡있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國際經濟環境의 變化	4
1. 世界經濟秩序 變化	4
2. 亞·太地域 經濟協力	11
3. 東北亞地域 經濟協力	20
第 III 章 統一韓國의 經濟的 位相	33
1. 2000年代 南北韓의 經濟力	33
2. 統一韓國의 經濟的 位相	40
第 IV 章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52
1. 多者間 經濟協力에 대한 主要國家의 立場	52
2.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58
第 V 章 結 論	65

第 I 章 序 論

냉전이후시대의 국제경제구조는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안보구조와는 달리 미국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일본의 지속적 경제력 향상, 유럽연합(EU)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다극화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화되고 있으나, 동시에 유럽연합의 확장,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설치,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자유무역지대(AFTA) 추구 등 지역주의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변화추세 속에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회원국들은 국제경제분야에서의 유엔이라 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에 합의하였다. 한편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은 개혁·개방의 심화로 괄목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도 제한적이지만 경제적으로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지역에서 새로운 신흥공업국(New NIES)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經濟的 力動性은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ANIES)과 함께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외부문, 특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역내 및 역외국가와의 상호의존성 증대는 국가간 협력을 심화하는肯

定的 效果가 있는 반면, 국제무대에서의 국가간 경쟁을 유발하고 무역마찰 등 국가간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도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요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태 지역 국가들은 상호의존도 증대에 따른 국가간 경제협력 문제를 쌍무적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상호의존도의 효과적 관리와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은 북방정책의 성공적 수행으로 1990년에 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한데 이어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를 이룩하였다. 한·소 및 한·중 수교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국제정치적 개가임과 동시에 한국이 정치적 비정상적 관계로 인하여 經濟關係를 맺을 수 없었던 두 나라와 경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반면 북한은 부분적 개방의사만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구도의 합의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북·일 관계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경제적 실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서방세계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의 참가 및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개발·홍보를 통하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북투자를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國際經濟의 變化 추세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역동성과 북한의 제한적 개방 등이 韓半島 統一環境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21세기 한반도경제의 대외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21세기를 향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를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둘째, 21세기 한반도경제의 위상을 인접국가 및 세계 주요 경제주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한다. 셋째,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II 章 國際經濟環境의 變化

1. 世界經濟秩序 變化

가. 世界貿易機構의 出帆

국제경제환경은 1995년 1월 1일 출범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의 활동에 따라 큰 폭으로 자유화될 예정이다. 국제무역의 자유화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의하여 전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었는 바, GATT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1993년말의 회원국간 합의를 거쳐 1994년 4월 12-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마무리함으로써 WTO 신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에 따라 1947년 10월 제정되어 47년동안 세계교역을 관리해 온 GATT체제는 WTO체제로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되었다.

WTO체제는 기본적으로 과거 GATT가 수행하였던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GATT가 협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強力한 國際機構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ATT는 최근 체약국간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나 차별적 지역주의의 대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국제무역의 새로운 구도변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¹⁾

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WTO출범과 新交易秩序」(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p. 12 참조.

따라서 WTO체제는 GATT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무역과 관련한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고, 회원국의 국제무역관련 법·제도·관행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세계무역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려 하고 있다. 즉, WTO체제는 세계경제를 전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무역에 관한 단일협정을 통하여 國際金融分野의 국제통화기금(IMF) 및 經濟開發分野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함께 國際貿易分野의 제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²⁾

WTO협정문은 회원국간의 무역관련 활동에 대한 공통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본문인 WTO설립협정과 함께 GATT 1994 및 분야별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부속서들인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동경 MTN협정, 새로운 다자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분쟁해결관련 諒解, 무역정책 검토제도 등 多者間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 MTA)들과 민간항공기 교역협정, 정부조달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쇠고기협정 등 數者間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들로 구성되어 있다.

WTO체제는 ①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에 의한 무역정책의 투명성 제고, ②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분쟁해결 및 조정능력 제고, ③ 협정위반 制裁조치 강화, ④ 신속한 의

2) UR최종협정문(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은 UR협상결과의 확인과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할 다자간 협정들로 구성된 WTO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결정방식 등을 통하여 GATT체제보다 효율적으로 국제무역관계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³⁾

이와 같은 강력한 WTO의 출범은 한국이 1993년 기준 총 교역규모 1,660억달러로 세계 12위의 교역대국이며, EU를 하나로 볼 때는 5위국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과거 GATT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상품을 중심으로 한 교역의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WTO에 의한 자유무역체제의 대상은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으로 확대되어 향후 국제경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가 하나의 교역규범과 하나의 국제무역기구에 의해 규율되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회원국간 무역장벽은 완화되고 시장개방은 확대되며 자유로운 교역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교역규범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점차 국경을 넘어선 자유경쟁을 통하여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다.

3) 무역정책검토기구는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매 2년마다, 교역순위 5위에서 20위까지의 16개국은 매 4년마다, 그리고 기타국들은 매 6년마다 정기적으로 TPRM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WTO는 기본적으로는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시한을 정하고 다수결 표결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GATT가 어느 한 국가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던데 반하여, WTO는 의사결정 시한을 90일, 회원국의 3/4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의 책, pp. 25-27 참조.

나. 地域經濟協力の 持續

유럽대륙에서 시작된 지역경제협력은 전세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중이다. 유럽연합은 기존의 12개 회원국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1995년 1월 1일 신규가입함으로써 회원국 수가 15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유럽지역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⁴⁾ 한편 1994년에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뿐 아니라, 남미지역까지 포괄하는 미주대륙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s: FTAA)로 발전될 전망이다.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은 아·태 경제협력체(APEC)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여 역내국가 18개국을 포괄한 多者間 經濟協力を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 발전은 유럽, 미주대륙, 아시아지역의 3대 경제권역에 의하여 주도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주의는 3대 권역 이외에도 중남미지역에서는 중남미통합연합(LAIA), 안데스공동시장(ANCOM), 중미공동시장(CACOM), 카리브해공동체(CARICOM) 등이, 아랍지역에서는 마그레브 국제연합(AMU), 페르시아만제국 협력위원회(GCC), 회교공동시장(EACM) 등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서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ECOWAS), 동아프리카공동체(EACM), 중앙아프리카

4) 유럽연합은 총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현재의 6조 9000억달러에서 확대후 약 7조3,830억달러, 인구가 현재의 3억4,867만명에서 3억7,045만명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가 된다. 중앙일보, 1994년 12월 14일.

관세 및 경제동맹(EGUNA) 등에 의하여 소지역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⁵⁾

이와 같은 지역경제협력의 강화 현상은 상기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의한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역협력의 심화가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와 연결될 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국제경제환경이 현재보다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지역적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경제통합이 폐쇄적으로 발전될 경우에는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 노력이 퇴색될 전망이다.

다. 中位圈 國家들의 浮上

세계경제는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선진7개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주도하여 왔으며, 21세기에든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여 있는 반면, 新興工業國 및 開途國은 경제적 역동성에 의한 비약적 성장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등 신흥공업국(NIEs)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신흥공업국(New NIEs)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

5)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편, 「21세기의 한국」, p. 1152 참조.

등이 있는 아시아지역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1985-1990년간 상기한 아시아국가들은 여타 개도국들의 2배이상 되는 평균 7.8%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가 1995-2000년 사이에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반하여, 이들 국가들은 6-7%사이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애 힘입어 이들 국가들이 세계경제 및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즉, 아시아지역 전체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의 약 1/5에서 현재는 약 1/4로 증가하였는 바, 상기한 국가들의 비중은 1980년대의 약 6%에서 현재는 약 9%로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개도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개도국의 무역은 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선진국이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었는데 반하여, 상기한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개도국의 무역은 1980년대의 10%에서 1991년에는 약 15%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무역비중은 계속적 신장세를 보여 2000년에는 세계무역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⁶⁾

6) DRI/McGraw-Hill,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Third Quarter 1994*. (Lexington: McGraw-Hill, 1994), pp. 9~16 참조.

이와 같은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개도국의 비약적 경제성장 및 무역증대와 함께 동유럽국가들 또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힘입어 세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하여, 동유럽국가들은 산업생산과 농업생산의 증가로 인하여 1993년에 경제가 성장세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동유럽국가들의 경제발전은 실업률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 및 투자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1993년에 폴란드는 11%, 헝가리는 13.8%의 생산성 향상을 보였다.

헝가리와 폴란드, 슬로베니아는 1994년에 10%이상의 산업생산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등 동유럽국가들은 질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동유럽국가들은 유럽연합이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와 구소련 공화국들의 경제회복에 따라 1990년대 후반의 경제발전도 낙관적이라 하겠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 이들 국가들은 4-6%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다.⁷⁾

동유럽국가들과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개도국의 유사점은 이들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輸出主導戰略에 의하여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공산품 수출에서 괄목할

7) 앞의 책, pp. 17~26 참조.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9년에서 1992년사이 체코, 헝가리 및 폴란드 등 동유럽 3개국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대한 공산품수출이 22%, 31%, 63%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발전전략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 亞·太地域 經濟協力

가. 亞·太經濟協力體의 發展

아·태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는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 12개국 외무·통상장관이 회동함으로써 설립되었으며, 제2차 회의는 1990년 7월 싱가포르, 제3차 회의는 1991년 한국, 제4차 회의는 1992년 태국, 제5차 회의는 1993년 미국, 그리고 제6차 회의는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호주회의에서는 협력체의 개방성 유지, 역내 경제주체의 다양성 존중, 합의에 의한 협력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태협력의 제원칙이 채택되었다. 제2차 싱가포르회의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무역 및 투자자료 검토,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에너지, 수산, 해양자원 보존 등 7개 협력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고 실무반을 발족시켰다. 제3차 한국회의에서는 APEC의 목표 및 활동범위를 밝힌 「서울선언」을 채택하였

다. 동 선언에 명시된 APEC의 목표는 아·태지역 및 세계경제의 발전 도모, 개방적·다자간 교역질서의 확립·강화, GATT원칙에 의거한 교역 장애요인 제거 등이며, 활동범위는 정보의 교환 및 정책의 협의, 무역 장애 제거를 위한 전략 수립, 무역, 투자, 자본교류의 촉진, 협력사업의 전개 등이다. 제4차 태국회의에서는 APEC 사무국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APEC의 장기적 비전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을 발족시켰다.

제5차 미국회의에서는 각료회의에서 무역투자위원회(APEC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의 설립에 합의하였으며, ① 開放的 地域主義와 시장기구에 의한 역내 상호의존도의 제고, ② GATT의 원칙이 多者間 및 國際貿易體制와 APEC의 근간임을 인식, ③ 범세계적 중요성을 지닌 무역 및 투자현안에 대한 APEC 공동보조 필요성에 대한 상호이해 표명, ④ 역내 개도국의 발전단계 및 사회·정치체제 차이 인식, ⑤ 개방적·다자간 교역질서의 확립 강화, GATT원칙에 의거한 교역장애요인 제거 등 「서울 APEC선언」에 명기된 목적 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APEC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한편 著名人士그룹은 아·태경제공동체(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를 구성하기 위하여, ① APEC이 아·태지역 자유무역의 목적을 설정할 것, ② 무역확대를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조기 실시, ③ 사회간접자본 등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 협력, ④ APEC의 제도화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5차 APEC회의에서는 각료회의 후 아·태지역 최초로 개최된 지도자회의에서 ① 전세계 GNP의 50% 및 무역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역동적 아·태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②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이 개방된 다자무역체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1993년 12월 15일까지의 타결을 촉구, ③ 아·태경제공동체의 비전은 개방성과 동반자관계에 기초하며 무역과 투자장벽을 낮춤으로써 역내 및 역외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APEC 지도자의 경제비전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 第6次 亞·太經濟協力體 會議

1994년에 개최된 제6차 인도네시아회의에는 18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지도자회의에서 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들의 무역자유화 시한을 설정하는 등 아·태경제협력체 발전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저명인사그룹은 제6차 APEC회의에 2000년대 아·태지역의 자유무역 실현을 위한 제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2000년에 시작하여 2020년 완결을 목표로 하는 아·태지역 무역자유화 방안의 실시를 권고하는 동시에 역내 무역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APEC 투자원칙 협약, 표준조화, 통화·거시경제정책

협조, 환경, 경쟁정책, 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 분야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2020년 아·태지역 자유무역 실현을 APEC의 궁극적 목표로 권고하고 있으며, ① 2000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아·태지역내 상품, 서비스, 자본, 투자 등 분야에서 자유무역 실현, ② WTO 출범 이후의 범세계적 차원의 추가 자유화 진전 선도, ③ 국제투자 촉진을 위한 'APEC 투자원칙협약'의 채택 등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동 보고서는 또한 2000년까지 각 회원국별 개방시간표의 설정, 각국 의회 및 국내 주요기관과의 협의, APEC 차원의 구체적 실행계획의 수립, 합의사항에 대한 각국별 비준 등 준비를 완료하고 2000년을 기점으로 자유화 일정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역내무역자유화를 위하여 APEC은 관세, 쿼타 등 전통적 무역장벽조치들의 제거는 물론 정부조달, 공업표준 문제와 같은 교역관련 국내정책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넷째, APEC 비회원국에게도 상호주의원칙에 의거 APEC 자유화의 혜택을 공유하고 다수국가 또는 역외의 지역협력체들이 APEC의 자유화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실질적인 다자간 자유화 효과의 실현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APEC은 GATT원칙과 부합하는 방식의 아·태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무역자유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째, 저명인사그룹은 이외에도 ① 각국 투자정책의 투명성 제고, ②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내국민대우, ③ 공공목적 을 위한 국유화조치의 경우에 대한 보상 원칙, ④ 국내부품 사용의무, 최소수출 쿼타제와 같은 의무이행조항의 신설이나 세제상 우대와 같은 투자유인책 사용 금지, ⑤ 실효성있는 분쟁조정절차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APEC 투자원칙협 약'을 채택하여 아·태지역의 국제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명인사그룹의 권고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개 최된 각료회의에서는 ① 經濟的 趨勢 관련사항, ② 貿易과 投資 관련사항, ③ 제2차 저명인사그룹 보고서, ④ 인적개발 문제, ⑤ 사회간접자본 향상 관련 협력, ⑥ 중소기업 문제, ⑦ 지도자회의의 비전 실천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⁸⁾ 첫째, 무역투자위원회의 활 동과 관련, APEC 각료들은 표준·조화 소위원회와 관세절차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각국 각료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를 실천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각국이 국내적 비준절차를 빠른 시일안에 마치기로 합의하였 다. 한편 GATT 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이 세계무역기 구의 창립 회원국이 되도록 지원한다.

8)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Ministerial Meeting, *Joint Statement*, November 11-12, 1994. Jakarta, Indonesia.

셋째, 각료회의에서는 또한 제7차 閣僚會議을 1995년에 일본에서, 1996년 제8차 각료회의를 필리핀, 1997년 제9차 각료회의를 캐나다, 1998년 제10차 각료회의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각료회의에 이어 개최된 지도자회의에서는 APEC은 ① 개방적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 ② 아·태지역의 투자 및 무역 자유화 진전, ③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을 밝혔다.⁹⁾ 따라서 지도자들은 개방적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조속히 시행하는 동시에 보호무역조치의 사용을 자제하며, 세계무역기구에의 참가가 개방적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한다는 인식하에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지원한다. 또한 2020년까지 아·태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완결하며, 先進國은 2010년까지 開途國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완결한다.

지도자회의는 아·태지역의 무역 자유화와 관련, 각료회의에 관세, 표준 및 투자 관련 원칙을 설립하고 행정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하기를 요청하며, APEC 국가간 통상 및 경제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의 분

9) 아·태경제협력체는 매년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93년 미국 클린턴대 통령이 제안하여 각료회의 후 아·태지역의 지도자들이 회동하는 지도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94년에도 지도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도자회의의 공식명칭은 대만, 홍콩 등의 특수한 국제적 위치를 감안하여 경제지도자회의(Economic Leaders' Meeting)로 하고 있다.

쟁조정기구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협의기구를 창설할 것을 검토한다.¹⁰⁾

다. 亞·太地域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APEC은 금번 제6차 각료회의 및 제2차 지도자회의를 통하여 아·태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시한을 결정하였는바, APEC의 활동 강화가 예상된다. APEC의 활동 강화는 동 기구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전세계적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PEC 내 실제적 활동기구인 무역투자위원회(CTI)는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역내국가들이 채택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태지역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관계로 APEC의 회원국 대상은 이론적으로 남미지역 국가 중 태평양 연안국가들, 러시아, 인도차이나 3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회원국 가능국가들은 기존 회원국과의 경제관계의 긴밀성 정도에 따라 향후 가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남미 국가 중 칠레가 1994년부터 회원국이 되었으며 러시아, 몽골 및 베트남도 加入 希望意思를 表明하고 있다.

둘째, APEC 지도자회의의 2년 연속 개최는 APEC의 성격이 경제차원에서 정치적 차원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예고하

10) 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of Common Resolve, Bogor, Indonesia. November 15, 1994.

고 있다. 즉 APEC 지도자회의가 경제지도자 회의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으나, 역내 각국의 지도자들이 회동한다는 점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아시아 순방시 발표한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이 안보와 정치 및 경제의 세 측면을 망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APEC의 범위가 정치 및 안보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아·태지역에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지역 차원의 경제협력기구가 존재 또는 발족 예정인 바, APEC은 광역차원의 경제협력기구로서 이들 기구의 전반적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지역 경제협력은 대상지역에 따라 소지역 및 광역차원으로 나뉘어지며, 단기적으로는 소지역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실제적 협력기구(NAFTA 및 AFTA)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광역차원에서는 회원국에 대한 강제력이 약한 협의수준의 기구(APEC)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994년에 개최된 지도자회의에서 아·태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시한이 결정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광역적 차원에서도 경제협력 수준이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소지역차원의 아·태 경제협력 추진현황

	NAFTA	AFTA	EAEC
참 가 국 (대외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ASEAN 6개국	미국, 중국, ANIES 4개국, ASEAN 5개 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추진경과	92.8 협상안 합 의 94.1부터 추 진	91년초 태국 제 안 93.1부터 추 진	90년말 말레이시아의 EAEG제안이 91.10 EAEC구상으로 변경
성 격	향후 15년 이내 자유무역권 형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장벽철폐 • 경쟁환경조성 • 투자기획확대 • 지적재산권 강화 	1993~2008 기 간중 자유무역 권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특혜관세 (CEPR) 도입 • 비 관 세 장 벽 철폐 	국제협상시 공동보 조, 역내국의 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 개방을 통하여 자유 무역체제확립에 기 여
전 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 기술, 노동결합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원산지규정 강화 등 역외 수출에 대한 차별 	제한적 대상품 목 및 예외 인 정으로 자유화 의 효과는 미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간 경 쟁적 이해관 계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 미국의 반 대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개방체제유지 및 APEC과의 조화 를 선언함에 따라 성립 가능성 증가 • 경제블럭이 아닌 협의체 형태를 띠 전망

3. 東北亞地域 經濟協力

가. 東北亞 經濟協力 構想

동북아지역에서는 21세기의 동북아지역을 상정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구상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각국의 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에 따라 ‘태평양 경제공동체’ 건립 구상을 시작으로 하여 한민족 경제공동체 성격의 ‘대중화공동시장’ 형성에 대한 구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남부연안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남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화남경제권은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 이들 지역과 중국측 경제특구와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구상은 화남경제권을 단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중국통일의 한 단계인 경제통합을 이룩하고 국내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大中華經濟圈’을 구축하겠다는 발상으로서 국제적 경제권역화라기 보다는 중국 자체의 경제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¹¹⁾

11) ‘태평양 경제공동체’ 구상은 역내 국가간의 무역, 자본 이동, 기술 이전 및 자원의 탐사와 개발 협력을 목표로 중국과 역내 선진공업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사회제도와 경제발전 정도가 다른 국가들간의 연계를 통하여 소련 패권주의의 침투를 막아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역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중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중화공동시장’은 세계적 지역주의화

한편, 중국측 학자들은 일본에서 ‘환일본해 경제권’을 주제로 한 논의가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황해 경제권’ 구상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배제된 황해 경제권 구상이 하나의 독립적 경제권을 구성한다기 보다는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달성을 위한 하나의 과도적 접근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동북아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최근 일본의 학자들은 ‘環日本海 經濟圈’ 구상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특히 니이가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동부지역에서 심포지엄 및 세미나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며 연구회가 조직되고 있다. 환일본해 경제권은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을 주요 구성국으로 하며 이들 국가들의 동해에 면한 지역을 주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측 구상의 특징은 동북아 경제권 구상에 있어서 광범위한 국가를 단위로 하기 보다는 환일본해 경제권과 같이 연해지역간의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자본 및 기술면에서 동북아지역에서 주도적 입장에 있으나 일본의 세계적 역할과 자본의 유동성 한계를 고려하여 환일본

추세에 중국인들이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경제권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吳勇錫,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中國의 構想과 戰略,”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pp. 160~98 참조.

12) 吳勇錫,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中國의 構想과 戰略,” p. 171 참조.

해 경제권이 개방적이어야 하며 배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³⁾

러시아연방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구체적 구상은 정리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에 극동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등 극동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구소련시대부터 표방되었는 바, 구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선언’에서 소련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임을 표방하고 소련이 아·태지역국가들과의 쌍무적 관계 활성화 및 소련 극동지역이 이 지역 경제협력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아·태지역에 대한 소련의 관심과 협력의지를 재표명하였으며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는 이후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나호트카시 일원에 「자유경제지대」를 창설하였으며,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도움으로 ‘광역블라디보스톡 경제특구’ 구상을 수립하였다.¹⁴⁾

북한은 동구권과의 교역 감소와 러시아의 원조중단 및 경제화결제요구로 인하여 대외무역관계가 대폭 축소되는 어려움

13) 姜興求, “東北亞經濟協力에 관한 日本의 視角과 展望,”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pp. 237~56 참조.

14) 李昌在, “東北亞經濟協力에 관한 蘇聯의 視角과 政策方向,”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pp. 199~36 참조.

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상대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국제연합개발기구」가 주관하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 학자 및 전문가들의 구상은 2000년대를 향한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동북아지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들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하여는 먼저 동북아지역 역내국가간 경제관계가 보다 더 긴밀화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학계, 재계 및 정부간 토의와 협상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도 아·태지역의 경제협의체 구성과정이 보여주듯이 먼저 학계 및 재계를 중심으로 한 토의를 통하여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북아지역의 경제관계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토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경제협의체 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發展

두만강지역개발은 동북아지역에서 최초의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이 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만강지역은 경제개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자본주의로의 전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연방, 그리고 제한적 개방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해 보려는 북한 등 경제적 장래가

불확실한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접경국가들의 불확실성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들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과 관련하여 동북아 경제권의 장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수립은 관련국가의 협조하에 국제연합개발기구(UNDP)가 주관하고 있다.¹⁵⁾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비록 소지역적 차원의 개발프로젝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동북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多者間 協力の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 계획의 발전방향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동북아 경제협력과 관련,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동북아지역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지지만 역내국가들이 정부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완성된 계획서에 대한 관계국 고위정부관계자의 승인을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동북아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다자간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5) 「국제연합개발기구」는 1992년 2월 서울에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제1차 「계획관리위원회」(PMC) 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였다. 1992년 10월 9~11일 사이 북경에서 열린 제2차 「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동안 옵서버로 참여하여 왔던 러시아연방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연방 및 몽골이 정회원국으로, 일본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자원조달문제와 관련 국제금융 기관 및 역외국가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바, 동 계획은 개방성을 유지할 것이다. 이와 같은 두만강지역개발 계획의 성격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역외국가들과의 협력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향후 약20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중인 바, 동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중국과 러시아연방 등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들과 북한과 같이 아직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의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므로 동 계획의 성공여부는 동구 개혁·개방의 성패와 더불어 주목되고 있다.

국제연합개발기구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냉전이후시대에 있어 국제연합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연합의 기능확대와 관련한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다. 東北亞地域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간 양자간 경제관계의 확대는 상호의존도 관리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의존도 심화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양자간, 다자간 또는 세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세계경제는 WTO를 통한 범세계적 무역관리와 유럽연합 등 지역주의화로 대변되는 다자간 상호의존 관리체제 및 양자간 협상을 통한 통상마찰 해소 등 다중적 구조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동북아시아도 역내 경제관계의 활성화로 인하여 하나의 경제권으로 부상하려는 초기단계에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相互依存度 擴大에 따르는 문제점을 양자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지역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다자간 접근 문제는 다음과 같은 촉진 및 제약요인에 의하여 그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다자간 기구에 의한 상호의존도 관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역내 상호의존도 증가추세이다. 이와 관련, 동북아시아에서는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원인제공시점과 피해시점 사이의 시간적 차이 때문에 원인제공자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우며 그 피해가 여러 국가에 걸쳐 확산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자적 접근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육로, 해로 및 항공로 등 교통망의 구축문제에 있어서도 다자간 접근이 양자간 접근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이 양자간 접근에 의한 해결이 곤란한 지역적 문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다자간 협상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역내 상호의존도 증가는 국가경계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제권 개념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콩과 중국 광둥성 사이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업체계의 형성 등 주로 동북아시아의 연안지역을 따라 이와 같은 경제권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역내활동 증가에 따라 국가간 경제관계뿐 아니라 역내 또는 역외 다국적기업과 역내국가사이의 협상 또는 다국적기업간의 협상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초국가적 경제관계의 확산은 점진적으로 다자간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시아 국가들간 경제관계의 특징은 수직적 분업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역내국가들간 수직적 분업의 심화는 후진국과 선진국간 남북문제를 대두시켜 역내 경제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고착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역내에서의 패권주의적 역할을 반대하는 역내국가들로서는 일본을 정점으로 하고 여타 국가들이 이를 따르는 안행모형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역내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점진적으로 수

평적 분업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바,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는 다자간 협의를 통한 역내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지지한다 하더라도 타 지역의 지역주의화 경향을 저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역내국가들은 유럽공동체나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비하여 동북아시아에도 지역협체를 결성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질서하에서 경제가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타 지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동북아시아는 아·태지역보다는 작은 지리적 범위를 가지고 있는 바, 아·태지역 경제협력문제가 다양한 국가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동북아시아는 지리적 인접성 및 대상국가가 한정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한정성은 역내에 다자간 협의 기구를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다자간 접근은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역내 상호의존도가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동북아시아 역내 상호의존도 발전 추세를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경제통합이 가장 많이 진전된 유럽공동체의 경우, 1970년에 이미 역내무역 의존도가 50%를 넘어서 1991년에는 6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북미국가들도 40%수준에 달하는 역내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남아국가연합」도 15~18%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동북아지역 역내무역 의존도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고조에 달한 1991년에도 15.8%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낮은 역내무역 의존도는 동북아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구분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 현재 상황에서 지역경제협의체가 구성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지역별 역내무역 의존도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동 북 아	11.4	13.6	11.9	14.7	14.5	15.8
유 럽	50.5	50.3	52.4	54.8	60.9	60.7
북 미	40.0	36.6	33.1	38.7	39.3	39.0
동 남 아	16.4	14.2	16.6	18.3	16.7	17.5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irection of Trade*, 각년호.

* 유 럽: 유럽공동체, 북미: 미국, 멕시코, 캐나다,

* 동남아: 동남아국가연합

둘째, 일본의 역할 문제이다. 일본은 막대한 무역흑자와 경제규모로 세계적 경제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일본경제의 세계적 역할은 일본이 지역적 역할을 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한정된 세계경제 자본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일본이 동북아시아국가로서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에 치중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상호의존성 관리문제에 대한 다자간 접근에 있어 역내 유일한 선진국인 일본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한편 일본의 역할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역내국가들은 일본의 경제력을 인정하면서도 日本의 過去事와 관련하여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접근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역내국가들의 대미 의존도 문제이다. 역내국가들은 미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한 지역주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동북아시아 국가들만의 다자간 협의체 구성은 미국의 양해가 없이는 곤란한 실정이다.

넷째, 역내국가들의 경제발전 격차문제이다. 동북아시아에는 선진국인 일본, 신흥공업국인 한국, 개발도상국인 중국, 체제전환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연방과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주체경제의 비효율성으로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 등 경제발전 격차가 심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국가들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도출하기 힘든 실정이며, 러시아 및 북한의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은 역내국가들이 다자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다자간 접근에 대한 제약 및 촉진요인에 의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협력의 목표와 관련하여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유럽공동체와 같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경우와 역내국가간 경제관계 확대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두가지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경제협력의 궁극적 목적을 경제통합에 들 경우에는 우선 역내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들이 역내국가간 관세인하를 비롯하여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정책의 채택 등 역내국가들간 정책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배타성 또는 개방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활동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을 어떠한 형태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경제협력의 목적을 교역 및 직접투자를 비롯한 역내국가간 경제관계 확대와 경제관계 심화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협의하는 경우로 국한시킬 경우에는 우선

산업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산업간 무역을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국가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및 선진국의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 협조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역내경제관계를 현 시점에서 보면 앞의 분석이 보여주듯이 협력의 목표를 후자에 두고 상호의존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다자간 접근은 양자간 접근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東北亞 經濟協力은 당분간 양자간 경제관계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상호의존성을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관리하는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漸進的으로 多者間 協議를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第 III 章 統一韓國의 經濟的 位相

2000년대의 남북한 경제력에 대한 전망은 한반도가 2000년대에 통일된다고 가정할 때, 통일된 한국이 세계경제와 어떠한 경제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시금석이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00년대의 남북한 경제력을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경제력을 별도로 전망한 뒤, 양 경제가 세계적 차원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할 것인지를 분석한다.

1. 2000年代 南北韓의 經濟力

가. 南北韓의 經濟力

2000년대 남북한의 경제력을 전망하기 위하여 우선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경제력을 별도로 예측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인구와 일인당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및 국내총생산(GDP)을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00년과 2010년의 지표를 전망하였다.¹⁶⁾ 우선 남북한의 2000년과 2010년

16)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권의 공식적 국민소득에 대한 통계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장경제국가들과 대등하게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구매력 평가에 의한 일인당국민소득을 사용하기로 한다. 북한의 경우는 구매력 평가에 의한 수치가 없으나, 학계에서 통용되는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추정방법론상 북한의 생활 수준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金秀勇, 「NEARDA의 貿易現況과 發展展望」, p. 224 참조.

의 국내총생산 예측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한국은 고성장 시나리오에 의하면 국내총생산이 2000년에 6,027억달러, 2010년에 1조423억달러를 기록하여 1990년 국내총생산 3,077억달러의 약 2배 및 3.4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의하더라도 한국은 2000년에 5,482억달러, 2010년에 8,615억달러의 국내총생산을 기록하여, 1990년 국내총생산의 약 1.8배 및 2.8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고성장 시나리오에 의하면 2000년에 384억달러, 2010년에 915억달러의 국내총생산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성장 시나리오에 의하면 2000년에 316억달러, 2010년에 51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남북한의 국내총생산 전망

		GDP(백만달러)		
		1990	2000	2010
고	한 국	307732	602758	1042355
	북 한	21100	(7.0%) 38379	(5.6%) 91526
저	한 국	307732	548248	861570
	북 한	21100	(5.9%) 31641	(4.6%) 51736
			(4.9%)	(5.0%)

주: ()안의 숫자는 각기 1990년~2000년, 2000년~2010년 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출처: 金秀勇, 「NEARDA의 貿易現況과 發展展望」, p. 225.

남북한의 經濟力을 展望하기 위하여는 국내총생산 지표와 함께 인구증가의 전망도 중요하며, 국민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일인당국내총생산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남북한의 인구와 일인당국내총생산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남한의 인구는 2000년에 약 4천7백만명, 2010년에 약 5천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구매력(Purchasing Power Parity: PPP)에 의한 일인당국내총생산은 2000년에 1만2천8백달러, 2010년에 2만9백달러에 달하여, 1990년의 약 1.8배 및 약 2.9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의하면, 2000년에 1만1천7백달러, 2010년에 1만7천3백달러를 기록하여, 1990년의 약 1.6배 및 2.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인구는 2000년에 2천4백만명, 2010년에 2천7백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성장 시나리오에 의하면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2000년에 1천5백달러, 2010년에 3천3백달러, 저성장 시나리오에 의하면 2000년에 1천3백달러, 2010년에 1천9백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의 일인당 국내총생산 예측치는 1990년과 비교하면 고성장의 경우 약 1.6배 및 3.4배와 저성장의 경우 약 1.3배 및 1.9배에 달하는 것이다.

〈표 4〉 남북한의 일인당국내총생산 및 인구 전망

		일인당 GDP (달러)			인 구 (백만명)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고	한 국	7190	12876.2 (6%)	20974.0 (5%)	42.8	46.8 (0.9%)	49.7 (0.6%)
	북 한	991	1552.6 (5%)	3351.9 (8%)	21.3	24.7 (1.5%)	27.3 (1.0%)
저	한 국	7190	11711.8 (5%)	17336.3 (4%)	42.8	46.8 (0.9%)	49.7 (0.6%)
	북 한	991	1280.0 (3%)	1894.7 (4%)	21.3	24.7 (1.5%)	27.3 (1.0%)

주: ()안의 숫자는 각기 1990년~2000년, 2000년~2010년 간의 연 평균증가율임.

1인당 GDP는 구매력 평가(PPP) 기준임.

출처: 〈표 3〉과 같음.

다음으로 2000년대 남북한의 대외경제협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대 남북한의 수출입을 전망하면 〈표 5〉와 같다. 한국은 고성장 시나리오에 의하면 수출이 2000년에 1,358억달러, 2010년에 2,956억달러로 90년 수출 648억달러의 약 2.1배 및 4.6배에 달하는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수입은 2000년에 1,355억달러, 2010년에 2,719억달러를 기록하여 90년 수입 695억달러의 약 1.9배 및 3.9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의하더라도 한국의 수출은 2000년에 1,255억달러, 2010년에 2,442억

달러, 수입은 2000년에 1,264억달러, 2010년에 2,299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수출입 전망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표준식을 기준으로 했으며, 2010년에는 북한도 대외의존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국제적 표준치보다 더 높은 수치로 전망하였다.¹⁷⁾ 즉 북한은 고성장 시나리오에 의하면 수출이 2000년에 55억달러, 2010년에 154억달러로서, 90년 수출 17억달러의 약 3.3배 및 9.3배에 달하는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수입은 2000년에 62억달러, 2010년에 206억달러를 기록하여 90년 수입 25억달러의 약 2.5배 및 8.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남북한의 수출입 전망

(단위: 100만달러)

	시나리오	수출			수입		
		1990년	2000년	2010년	1990년	2000년	2010년
한국	고	64,837	135,831	295,653	69,585	135,477	271,957
	저		125,505	244,250		126,379	229,905
북한	고	1,657	5,514	15,439	2,502	6,206	20,613
	저		4,743	10,908		5,014	13,508

출처: 金秀勇, 「NEARDA의 貿易現況과 發展展望」, p. 226.

17) 앞의 책, p. 226 참조.

나. 南北韓 經濟力의 比較

위에서 살펴본 2000년과 2010년의 남북한 경제력 예측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인구수 격차는 1990년의 2천1백만명에서 2000년과 2010년에는 약2천2백만명으로 약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 인구를 배율로 비교하여 보면, 1990년에는 남한이 북한의 2배였으나, 2000년에는 1.9배, 2010년에는 1.8배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國內總生産 指標 展望을 통하여 남북한의 상대적 경제력을 분석하면 남북한은 1990년에는 남한이 3,077억달러, 북한이 211억달러로서 남한이 북한보다 2,866억달러 많았으며, 배율로 보면 남한이 북한의 약 14.6배에 달하였다. 이러한 남북한의 국내총생산 격차는 2000년에 남한이 6,027억달러, 북한이 384억달러를 기록하여 남한이 북한보다 무려 5,643억달러 많아지고, 남한이 북한의 약 15.7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0년의 예측치를 분석하면 남한은 1조423억달러, 북한은 915억달러의 국내총생산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한이 북한의 11.4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¹⁸⁾

남북한의 대외경제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수출입 지표 전

18) 남북한 국내총생산을 비교함에 있어 고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지표를 사용하였다.

망을 분석하면, 1990년 기준으로 볼 때 남한은 북한보다 수출면에서 약 39배, 수입면에서 약 27.8배를 기록하여 북한 경제의 폐쇄성과 남한 경제의 국제경제와의 상호의존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2000년대 남북한의 수출입 전망치를 배율로 보면, 2000년에는 남한의 수출이 1,358억달러 북한의 수출이 5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남한이 북한의 약 24.7배, 2010년에는 남한이 북한의 약 19.1배 더 수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와 같은 남북한의 2000년대 국내총생산과 일인당국내총생산 및 수출입액 예측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국내총생산을 볼 때, 북한이 남한의 1990년에는 약 6.9%, 2000년에는 약 6.4%, 2010년에는 약 8.8%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현재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남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經濟力을 保有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와 같은 북한 경제의 남한 경제에 대한 열세는 수출액 예측치를 분석하면 더욱 자명해진다. 북한은 1990년에 남한의 약 2.6%에 불과한 수출액과 4.6%에 불과한 수입액을 기록하였으며, 2000년에는 남한의 수출 약 4.1%, 수입 약 4.6%, 2010년에는 수출 약 5.2%, 수입 약 7.6%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북한은 자체 경제력이 남한에 비하여 절대적 열위에 있으며 2010년까지를 전망하더라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남한과 비교할 때 큰 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가 통합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국내총생산과 수출입 예측치와 남북한 경제의 상대적 우열비교를 통하여 드러났듯이 북한 지역경제의 발전 또는 후퇴가 남한 지역경제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¹⁹⁾ 또한 북한 지역경제의 대외무역이 남한 지역경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통일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방향은 남한 지역경제의 대외경제관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統一韓國의 經濟的 位相

가. 東北亞地域國家와의 比較

통일한국의 경제지표는 통일시점, 통일형태 및 방법에 따라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경제지표의 절대적 수치보다는 동북아시아국가와의 상대적 비교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통일한국의 경제지표를 2000년과 2010년 남·북한의 경제지표를 합산한 것으로

19) 북한 지역경제와 남한 지역경제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남한이 통일 비용을 조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다 심각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통일 비용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가정하여 東北亞地域國家와 비교하였다.

첫째, 통일한국과 동북아지역들의 인구 예측치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아래 표에서는 통일한국과 인접한 지역이 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 및 일본의 인구 전망을 통일한국과 비교하였다. 1990년 기준으로 볼 때, 남북한의 인구는 총 6천4백만명으로 중국의 동북3성(흑룡강, 길림, 요녕)의 인구 1억명의 64%에 불과하며, 일본과 비교하여도 5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 국가간 인구비율을 2000년대의 예측치 분석을 통하여 보면, 일본의 인구증가율 둔화로 인하여 통일한국의 인구가 2000년에는 일본의 56%, 2010년에는 60%에 달하게 된다. 한편 통일한국의 인구를 중국 동북3성 인구와 비교하면, 2000년에는 64%, 2010년에는 6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기본적으로 1990년 기준 8백만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지역 인구증가는 동북아 지역 전체로 볼 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統一韓國의 潛在的 市場은 중국 동북3성과 일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6〉 동북아 지역국가의 인구 전망

	인 구 (백만명)		
	1990	2000	2010
통 일 한 국	64.1	71.5	77.0
일 본	123.5	127.3 (0.3%)	128.5 (0.1%)
중 국	1134.0	1290.0 (1.3%)	1425.0 (1.0%)
후 룡 강	35.5	39.6	43.7
길 립	24.8	27.9	31.1
요 녕	39.7	44.7	49.9
러 시 아	288.6	303.4 (0.5%)	312.6 (0.3%)
극 동 지 역	8.1	8.5	9.1
몽 골	2.1	2.7 (2.5%)	3.3 (2.0%)

주: ()안의 숫자는 각기 1990년~2000년, 2000년~2010년 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출처: 〈표 3〉과 같음.

둘째, 통일한국의 국민총생산(GNP) 예측치를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우선 1990년 지표를 분석하면, 일본은 남북한의 약 11.2배, 중국은 남북한의 1.5배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의 국민총생산 예측치를 비교하면, 일본은 통일한국의 약 9.67배, 중국은 약 2배의 국민

총생산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한국과 일본간 경제력 격차는 다소 줄어드는 반면, 중국과 통일한국간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지표를 보면, 일본이 통일한국의 약 8.16배, 중국이 통일한국의 2.37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한반도와 일본간 相對的 經濟力 격차는 21세기에 들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중국과의 상대적 경제력 격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²⁰⁾

20) <표 7>의 예측치는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가정한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며, 저성장 경우의 장기전망은 아래 표와 같다.

<부표> 동북아지역국가의 국민총생산 전망

(단위: 10억달러)

	1990	2000	2010	2000/1990	2010/1990
통 일 한 국	279.6	489.7	877.6	1.75	3.14
일 본	3143.5	4790.9	7228.1	1.52	2.30
중 국	419.7	909.3	1926.7	2.17	4.59
후 통 강	14.1	23.6	38.7	1.67	2.74
길 림	8.4	13.7	22.4	1.63	2.67
요 녕	20.3	44.3	86.3	2.18	4.25
극 동 러 시 아	16.2	13.7	24.6	0.85	1.52
몽 골	1.6	1.5	2.6	0.93	1.63

출처: 鄭暢泳, 「TREDA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전망」, p. 71.

〈표 7〉 동북아시아지역국가의 국민총생산 전망

(단위: 10억달러)

	1990	2000	2010	2000/1990	2010/1990
통 일 한 국	279.6	524.9	1032.6	1.87	3.69
일 본	3143.5	5075.0	8424.1	1.61	2.68
중 국	419.7	1053.7	2448.8	2.51	5.83
후 룡 강	14.1	24.9	45.1	1.77	3.20
길 름	8.4	14.7	26.6	1.75	3.17
요 녕	20.3	47.7	102.0	2.35	5.02
극 동 러 시 아	16.2	14.7	27.0	0.91	1.67
몽 골	1.6	1.7	3.3	1.06	2.06

출처: 鄭暢泳, 「TREDA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전망」, p. 72.

셋째, 21세기 한반도 경제의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과 2010년의 동북아시아 국가간 무역예측치를 고성장 시나리오를 통하여 살펴보면 〈표 9〉 및 〈표 10〉과 같다. 기준년도인 1990년의 동북아 지역국가간 무역은 〈표 8〉과 같다. 동북아 역내무역은 기준년도인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2.4배, 2010년에 6.9배가 된다. 우선 북한의 전체수출에서 동북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88.7%이던 것이 2000년에 60.1%, 2010년에 55.0%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 무역 예측모형이 북한이 개방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에 의존하던 대외무역 형태에서 탈피하여 수출을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수출대상국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중국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한국의 북한의 수출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대동북아 수출의 경우 1990년에 비해 2000년에는 2.5배, 2010년에는 6.2배가 된다. 특히 1990년에 북한에 대한 수출이 미미하였으나, 2000년에는 대북수출이 역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2010년에는 5.6%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²¹⁾ 또한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라, 1990년 4.3%, 2000년 30.0%, 2010년 51.7%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다. 한편 일본에 대한 수출은 낮은 속도로 증가하여, 1990년에 92.0%로 압도적이던 것이 2000년에 62.4%, 2010년에 37.2%로 한국의 역내무역에서 대일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한다. 따라서 2000년에는 한국의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수출이 가장 높은 비중(62.4%)을 차지하지만, 2010년에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51.7%)을 차지하게 된다.

21) 물론 남북한 경제가 통합된 경우를 가정하면 남북한간에는 내국간거래가 활발해질 것이지만 현 분석에서 사용된 모델은 남북한 경제가 별개로 활동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 거래가 활발해질 것을 가정하였으나,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동북아 지역국가간 무역: 1990년

	한 국	북 한	일 본	중 국	구소련	몽 골	동북아	동북아 /세계	세 계
한 국		1.2	12637.9	584.8	519.1	0.5	13743.6	21.1	65015.4
		0.0	92.0	4.3	3.8	0.0	100.0		
		0.1	49.8	6.6	7.1	0.0	20.8		
북 한	11.1		299.5	112.1	1047.4	N.A.	1470.0	88.7	1656.6
	0.8		20.4	7.6	71.3		100.0		
	0.1		1.2	1.3	14.4		2.2		
일 본	17449.8	175.9		6129.0	2562.8	14.1	26331.7	9.2	286770.2
	66.3	0.7		23.3	9.7	0.1	100.0		
	85.2	8.1		68.7	35.1	0.8	39.9		
중 국	2502.5	358.2	8998.8		2239.2	29.8	14128.5	22.8	62062.9
	17.7	2.5	63.7		15.8	0.2	100.0		
	12.2	16.5	35.5		30.7	1.7	21.4		
구 소 련	332.7	1516.3	3114.3	1925.9		1693.5	8582.7	8.3	103911.1
	3.9	17.7	36.3	22.4		19.7	100.0		
	1.6	70.0	12.3	21.6		97.4	13.0		
몽 골	2.0	N.A.	17.5	10.1	742.1		771.6		N.A.
	0.3		2.3	1.3	96.2		100.0		
	0.0		0.1	0.1	10.2		1.2		
동 북 아 6 개 국	20298.1	2051.6	25067.9	8762.0	7110.6	1737.9	65028.1	12.5	519416.3
	31.2	3.2	38.5	13.5	10.9	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 북 아 / 세 계	29.0	82.0	10.8	18.2	5.9		13.8		
세 계	70077.5	2502.1	231225.8	48014.9	120963.9	N.A.	472784.1		

주: 각국의 첫번째 줄은 1990년도 가격기준 백만달러를 단위로 한 수출액이며, 둘째 줄은 동북아국가 전체에 대한 수출비율이며, 세째 줄은 해당국의 국가의 대동북아 수입액에 대한 수입비중임.
출처: 〈표 3〉과 같음.

〈표 9〉 동북아 지역국가간 무역: 2000년

	한 국	북 한	일 본	중 국	구소련	몽 골	동북아	동북아 /세계	세 계
한 국		915.8 2.7 28.5	21198.2 62.4 42.8	10198.5 30.0 18.5	1635.8 4.8 9.5	37.0 0.1 4.2	33985.2 100.0 21.6	25.0	135831
북 한	754.3 22.8 2.4		722.8 21.8 1.5	1471.0 44.4 2.7	358.7 10.8 2.1	6.1 0.2 0.7	3313.0 100.0 2.1	60.1	5514
일 본	21726.1 36.0 67.8	640.8 1.1 19.9		31489.6 52.2 57.2	6324.9 10.5 36.7	172.3 0.3 19.7	60353.7 100.0 38.3	12.0	501880
중 국	8430.4 20.6 26.3	1302.0 3.2 40.5	21906.3 53.6 44.2		8765.4 21.5 50.8	454.3 1.1 51.9	40858.3 100.0 25.8	23.2	176176
러 시 아	1103.2 5.9 3.4	350.3 1.9 10.9	5583.8 29.8 11.3	11504.3 61.4 20.9		205.3 1.1 23.5	18746.8 100.0 11.8	18.1	103301
몽 골	30.6 4.2 0.1	4.6 0.6 0.1	135.7 18.7 0.3	394.7 54.5 0.7	159.1 22.0 0.9		724.8 100.0 0.5	65.0	1115
동 북 아 6 개 국	32044.6 20.3 100.0	3213.6 2.0 100.0	49546.7 31.4 100.0	55058.1 34.9 100.0	17243.9 10.9 100.0	875.0 0.6 100.0	157981.8 100.0 100.0		
동 북 아 / 세 계	23.7	51.8	13.0	40.3	14.4	70.0			
세 계	135477	6206	380392	136627	120000	1250			

주: 각국의 첫번째 줄은 1990년도 가격기준 백만달러를 단위로 한 수출액이며, 둘째 줄은 동북아국가 전체에 대한 수출비율이며, 셋째 줄은 해당국의 국가의 대동북아 수입액에 대한 수입비중임.
출처: 〈표 3〉과 같음.

〈표 10〉 동북아 지역국가간 무역: 2010년

	한 국	북 한	일 본	중 국	구소련	몽 골	동북아	동북아 /세계	세 계
한 국		4798.0	31918.3	44349.4	4623.3	117.8	85806.8	29.0	295653
		5.6	37.2	51.7	5.4	0.1	100.0		
		34.3	29.6	22.8	7.9	4.8	19.2		
북 한	2155.0		1042.4	4729.0	560.7	7.9	8496.0	55.0	15439
	25.4		12.3	55.7	6.6	0.1	100.0		
	3.1		1.0	2.4	1.0	0.3	1.9		
일 본	31221.2	2006.9		88898.1	14003.2	326.1	136455.5	15.0	908460
	22.0	1.5		65.1	10.3	0.2	100.0		
	45.0	14.3		45.7	23.9	13.2	30.6		
중 국	31128.3	6074.2	61355.6		39149.7	1595.7	139303.9	25.0	557565
	22.3	4.4	44.0		28.1	1.1	100.0		
	45.5	43.4	56.9		66.7	64.6	31.3		
러 시 아	3886.1	112.5	13354.3	54795.0		422.4	73570.4	25.1	293315
	5.3	1.5	18.2	74.5		0.6	100.0		
	5.7	7.9	12.4	28.2		17.1	16.5		
몽 골	86.4	11.9	247.7	1605.9	319.2		2271.0	60.0	3875
	3.8	0.5	10.9	70.7	14.1		100.0		
	0.1	0.1	0.2	0.8	0.5		0.5		
동북아 6 개 국	68478.3	14003.6	107918.3	194377.2	58656.1	2470.0	445903.5		
	15.4	3.1	24.2	43.6	13.2	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북아 / 세 계	25.2	67.9	13.1	47.3	20.2	65.0			
세 계	271957	20613	823178	411241	290000	3800			

주: 각국의 첫번째 줄은 1990년도 가격기준 백만달러를 단위로 한 수출액이며, 둘째 줄은 동북아국가 전체에 대한 수출비율이며, 셋째 줄은 해당국의 국가의 대동북아 수입액에 대한 수입비중임.
출처: 〈표 3〉과 같음.

나. 世界속의 統一韓國

21세기에 한국은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을 통하여 볼 때, 세계 10대 경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00년대 세계적 10대 주요 경제주체의 국내총생산 전망치를 보면 <표 11>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세계각국의 국내총생산 지표 예상을 분석하면, 한국은 2000년에 10위, 2010년에 9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의 한국 경제력은 미국의 6.8%, 일본의 9.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0년에는 미국의 11.0%, 일본의 15.7%에 달하여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10대 經濟強國에 아시아권 국가가 일본, 중국, 한국 등 3개국 기록되어 있어,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2000년대의 경제를 아·태지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표 11〉 2000년대의 10대 주요 경제주체: GDP

(단위: 10억달러)

	1990년	2000년 ¹⁾	2010년 ²⁾
미 국	5,546	8,013	12,115
일 본	2,949	5,498	8,474
독 일	1,640	2,391	4,020
프랑스	1,196	1,604	2,663
중 국 ³⁾	364	946	2,202
브라질	479	1,070	2,174
이태리	1,095	1,273	2,014
영 국	979	1,192	1,889
한 국	244	544	1,332
캐나다	574	711	1,145

주: 1) 1995-2000년 평균

2) 2000-2010년 평균

3) 2000년과 2010년 예측치는 중국과 홍콩을 합한 것임.

출처: DRI/McGraw-Hill,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둘째, 〈표 12〉에 제시된 국가간 경제관계를 나타내는 수출과 수입 지표의 2000년대 전망치를 분석하면, 한국은 수출과 수입 양면에서 세계 10위권에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과 수입은 1990년에 770억달러 및 800억달러로서 미국의 6,810억달러 및 7,390억달러의 약 11.3% 및 10.8%에 불과하나, 2010년에는 한국이 미국 수출과 수입의 19.8% 및 18.7%에 달하는 수출 4,020억달러 및 수입 3,9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지표를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수출과 수입이 2010년에는 일본의 34.3% 및 37.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한국의 대외무역 증가는 앞에서 본 국내총생산 증가추세와 함께 韓國이 國際貿易에서 매우 重要的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12〉 2000년대의 10대 주요 경제주체: 수출과 수입

(단위: 10억달러)

		1990년	2000년 ¹⁾	2010년 ²⁾
수 출	미 국	681	1,049	2,026
	독 일	486	661	1,353
	일 본	446	707	1,171
	중 국 ³⁾	60	477	1,093
	프랑스	270	387	722
	영 국	237	343	636
	캐나다	158	276	577
	이태리	207	313	552
	벨기에	215	296	515
	한 국	77	165	402
수 입	미 국	739	1,200	2,125
	독 일	433	637	1,314
	중 국 ³⁾	49	479	1,089
	일 본	405	573	1,051
	프랑스	261	358	682
	영 국	263	354	630
	캐나다	179	284	573
	벨기에	211	295	519
	이태리	201	255	482
	한 국	80	165	398

주: 1) 1995-2000년 평균

2) 2000-2010년 평균

3) 2000년과 2010년 예측치는 중국과 홍콩을 합한 것임.

출처: 〈표 11〉과 같음.

第Ⅳ章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1. 多者間 經濟協力에 대한 主要國家의 立場

세계경제는 유럽대륙의 경제통합으로 대표되는 지역화추세에 따라 미주지역과 아·태지역에서도 다자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자간 경제협력의 강화현상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일한국외의 대외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반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의 다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입장을 분석한다.

가. 美 國

미국은 상대적 경제력의 약화 및 냉전이후시대 세계질서의 다극화 현상에 따른 자국의 입지약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주도권을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북미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전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를 통하여 21세기에 미주대륙을 자유무역지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자유무역 확대노력은 아·태지역에도 투영되어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아시아 순방시 발표한 「신

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통하여 아·태지역에 대하여 다자간 접근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즉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은 경제면에서는 무역투자자유화를, 안보면에서는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하여 자유·경제적·번영·평화가 보장되는 태평양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아·태지역 중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美國은 동아시아의 經濟的 力 動性을 중요시하고 있어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²²⁾

둘째, 미국은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태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은 일본과의 쌍무협상을 보완하는 동시에 미국의 貿易赤字 改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아시아지역이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자국의 경제적 이해가 심대한 영향을 받으리라는 인식하에 아·태지역 다자간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지역경제가 일본의 주도하에 엔블록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22) 미국의 총무역에서 APEC 회원국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3.5%(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할 경우에는 35.2%)이 지적되고 있다. Marcus Noland, "The United States and APEC: Foundation for Asia-Pacific Coope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EC and A New Pacific Community: Issues and Prospects,' 13-14 October 1994, Seoul, Organized by Sejong Institute.

넷째, 미국은 아·태지역의 대다수 국가가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이라는 점에 착안, 세계무역의 보호주의화 경향 및 유럽연합의 폐쇄적 경제통합 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태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력을 적극 이용하려 하고 있다.²³⁾

나. 日 本

일본은 1960년대 학계에서 태평양자유무역지대(Pacific Free Trade Area: PAFTA)안이 제시된 후 1970년대에 환태평양연구그룹에 의하여 환태평양연대보고서가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관심은 호주의 APEC 창설 제안에 초기부터 支持立場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태 경제협력체의 결성이 역내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며, 미·일 통상마찰을 회피하는 한 방편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태경제협력체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무역자유화 프로그램이 급진적으로 추진되어 자국에 시장개방압력으로 작용할

23) 이와 관련, 최창윤 교수는 “미국은 유럽연합체제에 대해 NAFTA를 결성하여 일차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APEC을 통하여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崔昌潤, “APEC에 대한 각국의 입장,” 한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와 세종연구원 공동주최, 「APEC의 발전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 (1994년 11월 4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APEC의 경제동향 및 현안부문 실무반 활동이 구체화되어 대일본 무역흑자 축소압력 강화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APEC의 실질적 정책협조는 견제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본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진하되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2차대전 중 아시아침략이라는 과거로 인하여 아·태 및 동북아시아에서 경제협력을 주도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은 이미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을 일본의 생산기지화하는데 성공하였으므로 굳이 전면에 나서 미국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아·태경제협력 주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이해에 편중된 협력구도 설정 가능성에 대하여는 경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개방경제연합(Open Economic Association)을 표방하면서, 자유무역지대 결성과 같은 포괄적인 자유화 추진보다는 아·태지역의 경제현실을 고려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협력단계를 높여 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하에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면서 자유무역주의를 확산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아시아와 북미지역이 연대해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지원하

는 APEC에 대한 참여가 우선적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中 國

중국은 GATT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PEC을 통한 경제교류 및 협력의 유용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APEC의 활동이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중국은 아·태경제협력이 자국의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키고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APEC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홍콩이나 대만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만이 자국과 같은 정치적 입지를 가지는 것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외무역의 3/4과 해외직접투자의 4/5가 APEC 회원국들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APEC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²⁴⁾

중국은 또한 자국의 지리적 위치가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지경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쪽으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면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 및 동남아국가들과 면하고 있다는 사실

24) Zhao Renwei, "China and APEC: A New Departure for Economic Coope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EC and A New Pacific Community: Issues and Prospects,' 13-14 October 1994, Seoul, Organized by Sejong Institute.

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개혁·개방에 따라 과거와 달리 대외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경학적 중요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²⁵⁾

한편 중국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광역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되, 소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이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중국은 일본, 한반도,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을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이 지역 국가간 經濟的 相互補完性에 의하여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국 남부지역,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하는 화남경제권이 중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소지역 차원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지역차원으로 더 나아가 광역적 차원으로 연결되는 다자간 경제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라. 東南亞國家聯合

동남아국가연합은 21세기에 역내국가간 무역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동남아지역 국가간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은 APEC의 역내 무역 자유화가 AFTA의 무역 자유화계획보다 빠르게 진행 될 경우 AFTA 결성의 이익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하여 아·태지역의

25) 앞의 글, p. 7~8 참조.

광역적 차원에서 역내 무역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국가연합은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가 개방압력을 통하여 동남아국가연합의 회원국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産業構造調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국가연합은 미국시장에의 높은 수출의존도와 지역안보에서의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미국이 아·태지역의 광역적 경제협력의 발전에 집착한 나머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아·태경제의 多樣性을 인정하지 않고 역내 개도국들에게 지나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국가연합은 APEC의 급속한 진전이 동남아국가연합 국가간 결속력을 완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APEC의 발전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APEC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로 머무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국가연합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제안한 동아시아경제회의(EAEC) 추진에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2.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21세기의 한반도경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역 및 경제 규모면에서 공히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중요성

에 따라 지경학적으로도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1세기에도 한국 경제에서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은 자립적 주체경제원칙하에 대외무역을 대내경제 활성화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한 결과 대외경제교류에 수반되는 선진국의 기술 및 자본 활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최근 경제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해외자본유치를 위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법을 제정·공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한반도경제의 대외경제협력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지역의 인접국가와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 미국을 비롯한 북미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고, 동남아국가연합의 경제적 역동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21세기 통일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世界貿易의 自由化 先導

한반도가 통일된다 하더라도 북한지역의 천연자원이 통일한국의 천연자원 부존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우

므로 통일한국은 자원의 수입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통일한국은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무역을 보호무역주의화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貿易 및 投資의 自由化를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우선 세계무역기구에서 추진할 세계무역의 자유화가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한국의 경제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경제의 관리에 있어 통일 한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발언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일한국은 현재의 G-7을 확대한 G-10에의 참여와 OECD, IMF 및 WTO 등 주요 국제경제협력기구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무역, 금융, 투자정책 등에 관한 다자간 국제질서의 정립과 강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나. 開放的 地域主義 維持

통일한국은 아·태지역 차원의 광역적 지역협력과 동북아시아 차원의 소지역적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閉鎖的 形態가 아닌 開放的 地域主義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를 모색함에 있어 아·태지역 경제협력은 정부간 협의체를 통하여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모색하

되,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은 국경을 넘어선 경제교류의 활성화라는 자연경제지역(Natural Economic Territory) 개념에 입각한 민간수준의 경제협력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지경학적 중요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북한 지역경제의 개방을 통한 통과 무역과 변경무역을 적극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은 북한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남한 지역경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북한 지역경제와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는 경제발전수준이 비슷하므로 이들 지역경제가 地理的 隣接性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경제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先·後進國間 橋梁役割 持續

통일한국 경제는 21세기에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일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남한 지역경제와 북한 지역경제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21세기 통일한국의 경제는 선진국형인 남한 지역경제와 후진국형인 북한 지역경제가 병존하는 상태에서 북한 지역경제를 남한 지역경제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中進國으로서 선·후진국간 교량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후진국에 대하여는 중간수준의 기술을 이전하고 선진국으로부터는 첨단기술을 이전받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은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에서 한국의 무역자유화 시한을 결정하는데 반영되어, 한국의 무역자유화 시한은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간인 2015년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한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경제관계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성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남북한 양지역 경제간 격차 조정문제와 아시아지역 개도국과의 원만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국제경제의 관리를 둘러싼 마찰이 노정될 경우 선진국과 후진국 입장을 조정하는 조정자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 多樣한 經濟協力 채널의 開發

통일한국의 인구 예측치를 보면 2000년에 7천1백만명, 2010년에 7천7백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접한 주요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⁶⁾ 한반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는

26) 통일한국의 2000년 및 2010년 인구는 중국의 12억9천만명 및 14억2천5백만명, 구소련의 3억3백만명 및 3억1천2백만명, 그리고 미국의 2억7천5백만명 및 2억9천8백만명에 비하면 중국의 5.5% 및 5.4%, 러시아의 23.4% 및 24.7%, 그리고 미국의 25.8% 및 25.8%에 해당한다.

한반도에 비하여 국토가 광활하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유럽 국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통일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3성이 통일한국의 주요 經濟協力 對象地域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통일한국이 인접국가와 대외경제협력을 모색함에 있어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함에 있어 민간단체의 역할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할 때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마. 國土均衡發展과의 調和

통일한국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은 한반도의 지경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외지향적 산업입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즉 통일한국의 대외지향적 장기발전전략은 신의주, 평양, 서울, 목포, 광양권을 기본축으로 설정하며 동북으로는 평양지역과 청진·나진을 연결, 동남으로는 대전과 부산간을 연결하는 국토개발 계획모델에 입각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⁷⁾

27) 수도권권은 한반도의 중앙으로서 행정 및 정보교류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대전대권과 평양대권은 각각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중심지 역할

통일한국의 역내 경제관계를 양자관계에서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통일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이 중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대일의존도는 완화될 것인 바, 이는 한국의 대미의존도와 대일의존도로 인하여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던 국토의 불균형 발전 현상을 지양하고 서해안지역 발전을 통하여 2000년대의 대외경제협력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 제시되고 있는 경제협력 구상과 관련, 한반도의 서해를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과 한반도의 동해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의 활성화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경제협력은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발전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을 담당하며, 광주, 대구, 원산, 함흥은 국내지향적 지역중심지로, 신의주, 청진 및 나진, 목포 및 광양, 부산은 대외적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여 국토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백두산 및 개마고원, 금강산과 설악산 및 태백산맥, 그리고 지리산지역과 남해도서들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남게 되어 한민족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韓國開發研究院, 「南北韓 經濟共同體形成을 위한 政策課題」(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3), p. 58 참조.

第 V 章 結 論

중국의 개혁·개방과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은 한국의 양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경제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을 모색한다면 南北韓 經濟關係도 活性化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의 경제개방과 개혁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심화하는 한편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이 통일을 향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단절된 경제협력의 고리를 한민족이 합심하여 이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 시점에서 통일한국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인접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경제관계 확대와 관련, 한국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며 한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만주지방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중국 거주 조선족과의 경제협력은 北韓住民들에게 韓國의 發展相을 알리

는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해외거주 동포들의 생활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대북한 수교교섭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북한 배상금을 이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의 대북한 배상금이 북한에서 경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의 자원개발시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등 제3국에서의 남북한 합작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3국에서의 南北韓 合作事業은 북한으로서 는 개방에 따른 체제위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환영할 일인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연합개발기구 주관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한국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향후 약 20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중인 바, 한반도의 통일상황을 염두에 두고 동 계획이 통일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우회적 접근방법이 사실은 차선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간 직접 경제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어

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은 다자간, 지역간, 개별국가간 장기전략 구축에 의한 중층적 접근을 통하여 한반도의 경제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통일한국은 아·태경제협력체에 의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활용하여 통일한국의 아·태지역과의 무역을 폭넓게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의하여 추진될 전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의 결실을 공유하기 위하여 經濟를 自由化, 世界化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대응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역내국가들이 지역주의화를 추구할 경우 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역내국가간 상호의존도 심화에서 비롯될 제문제를 민간수준에서 토의하는 경제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의체 형태의 역내지역기구는 한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역외국가들의 東北亞地域의 地域主義化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의 양자간 대외경제협력은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첨단기술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興求.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日本의 視角과 展望.”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金秀勇. “NEARDA의 貿易現況과 發展展望.”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에 대한 分野別 評價」.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編.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에 대한 分野別 評價」.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 _____. 「WTO 출범과 新交易秩序」.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 _____.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편. 「21세기의 한국: 2020년을 바라본 장기정책과 전략」. 서울: 서울프레스, 1994.
- 吳勇錫.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中國의 構想과 戰略.”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李昌在.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蘇聯의 視角과 政策方向.”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鄭永祿. 「東北亞地域 貿易構造와 域內輸出競爭力 比較」. 서

- 을: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 鄭暢泳. “TREDA의 經濟成長과 產業構造 展望.”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에 대한 分野別 評價」.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 崔昌潤. “APEC에 대한 各國의 입장.” 한국 태평양경제협력 위원회와 세종연구원 공동주최, 「APEC의 발전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 1994.
- 韓國開發研究院. 「南北韓 經濟共同體形成을 위한 政策課題」.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3.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chieving the APEC Vision: Free and Open Trade in the Asia Pacific*. Second Report of the Eminent Persons Group, 1994.
- Asia-Pacific Economic Leaders' Meeting, *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of Common Resolve*, November 15, 1994, Bogor, Indonesia.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Ministerial Meeting, *Joint Statement*, November 11-12, 1994, Jakarta, Indonesia.
- DRI/McGraw-Hill.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Lexington: McGraw-Hill, 1994.
- East Asia Analytical Unit. *Korea to the Year 2000*.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992.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Group on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Options for Japan*. 199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irection of Trade*. Various Years.

Kuribayashi, Sumio. *Rethinking Development Strategy in Northeast Asia*. Japan: Sasakawa Peace Foundation, 1993.

Noland, Marcus. "The United States and APEC: Foundation for Asia-Pacific Coope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EC and A New Pacific Community: Issues and Prospects,' 13-14 October 1994, Seoul, Organized by Sejong Institut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4: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Zhao, Renwei. "China and APEC: A New Departure for Economic Coope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EC and A New Pacific Community: Issues and Prospects,' 13-14 October 1994, Seoul, Organized by Sejong Institute.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關稅부과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核 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1 貨幣 經濟 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 多者間 經濟協力 關聯 -

研究報告書 94-18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2月 日

發行日 1994年 12月 日
